광주·전남 주택 인허가 늘었지만 착공·분양 '썰렁'

작년 35% ↑ 7764가구·102% ↑ 1만1553가구
부동산경기 위축에 공급 지표 최대 80% 급감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택 인허가는 증가했지만 착공·분양·준공물량은 전년 대비 많게는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방 부동산경기 위축에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주택통계'를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의 지난해 1~12월 주택 인허가는 각각 7764가구, 1만1553가구로 전년 대비 34.9%, 101.7%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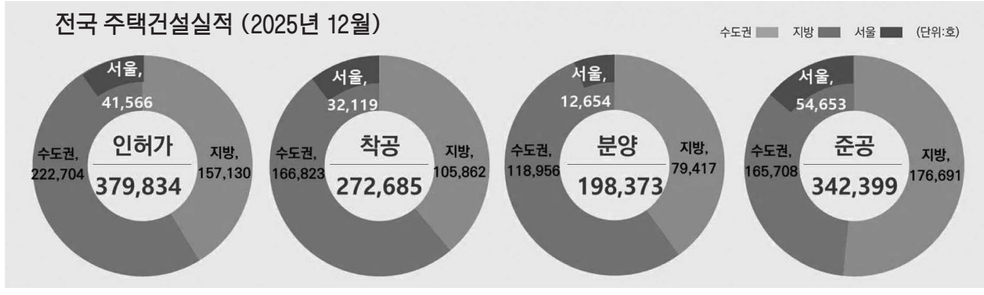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 주택 공급의 출발점인 착공 실적은 크게 위축됐다. 광주의 지난해 착공 물량은 3331가구로 전년 대비 17.6% 감소했고, 전남도 7079가구로 30.6% 줄었다.

분양 시장의 위축은 더욱 뚜렷했다. 광주는 지난해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1717가구로 전년 대비 86.3% 급감했고, 전남 역시 1824가구로 62.2% 줄었다.

준공 물량도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광주의 연간 준공 물량은 8466가구로 전년 대비 21.7% 감소, 전남은 1만1204가구로 29.8% 줄었다. 이는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흐름은 광주·전남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물량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며, 부동산 경기 위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1~12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37만983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



수도권(22만2704가구)은 같은 기간 4.9%, 서울(4만1566가구)은 19.2% 각각 감소했고 지방(15만7130가구)은 21.9% 줄었다.

착공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1% 줄어든 27만2685가구로 집계됐다.

서울(3만2119가구)이 전년 대비 23.2% 늘었고 수도권(16만6823가구)도 2.2% 증가했으나 지방(10만5862가구)은 24.5% 감소해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연간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국 19만837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줄었다.

서울(1만2654가구)이 53.3% 줄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수도권(11만8956가구)은 8.0%, 지방(7만9417가구)은 21.9% 각각 감소했다.

전국 준공(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17.8% 감소한 34만2399가구였다.

서울(5만4653가구)은 같은 기간 39.7% 늘었으나 수도권 전체(16만5708가구)로는 13.5%, 지방(17만6691가구)은 21.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전국 종합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2893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서울(8556건)은 전월 대비 13.2%, 수도권(2만9048건)은 4.9% 각각 늘었고 지방(3만3845건)은 증가폭이 0.4%로 낮았다.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국 기준 4만8978건으로 전월 대비 0.3% 줄었다.

다만 서울(4871건)은 10.8%로 늘었고 수도권 전체(2만1225건)로는 2.2% 증가했다.

서울의 연간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42.6% 증가한 8만3131건으로 집계됐다.

1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보다 22.2% 증가한 25만4149건이었다.

전세 거래량(8만7254건)이 전월 대비 15.4% 늘어나는 동안 월세(보증부 월세, 반전세 등 포함)는 16만6895건으로 26.1% 늘어 증가폭이 컸다.

1~12월 누계 기준으로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63.0%로 전년 동기 대비 5.4%p 상승했다. 월세 비중은 2021년 43.5%에서 2022년 52.0%, 2023년 54.9%, 2024년 57.6%에 이어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10가구로 전월 대비 3.3%(2284가구)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전월보다 1.8%(525가구) 감소해 2만8641가구로 줄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4398가구로 전체의 약 85.2%였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기획 용역 착수보고회 및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국토부,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본격화

기획위원회 출범식…사전기획 용역 착수보고회도
하반기 기본 구상·마스터플랜 마련…2028년 착공

광주시가 첨단 모빌리티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조성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의 밑그림이 구체화하면서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기획 용역 착수보고회 및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는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99만1735㎡ 일원에 조성되는 미래형 신도시로,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개발·실증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학교수, 네이버클라우드 등 산·학·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과 기본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착수보고회에 이어 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광주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사업이라는 데 공감하며,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시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획위원들은 광주가 지속 가능한 'AI 모빌리티 시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광주가 보유한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미래차 산업 기반,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부·산업부 국정과제와 과기정통부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기본 구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시는 오는 5월까지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 분석 △프로젝트 비전 및 목표 설정 △입지 및 공간 구상 △메가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방안 △단계별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기본 구상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31번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결합한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를 조성해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자율주행 전용 데이터센터, 첨단 모빌리티 관제센터, 연구개발(R&D) 및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지원시설, 버티포트(Vertiport), 자율차 시험트랙 등 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버티포트는 도심항공교통(UAM) 기체의 이착륙과 승객 탑승, 충전·정비 등을 담당하는 전용 시설을 말한다.

시범도시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이 지상과 상공을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가사·물류를 담당하는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건축물은 도로와 버티포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입체 구조로 조성되며, 지하에는 물류와 로봇 이동 통로를 구축해 무인 물류 체계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속에서 미래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지역 중기 R&D 과제 공모…1000억 투입

중기부, 비수도권 14개 시도 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 유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은 1일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며,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기업 역량강화 등 2가지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지역기업 역량 강화는 잠재력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기업의 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이면 기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연계도 강화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과제는 '레전드 50+'와 연계해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기업 역량강화 과제는 일정 기간 R&D 수행 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비R&D 지원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월 3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수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공공 건설현장 중대재해 위험 '사전 차단'

광주고용청, 현장 불시점검…재래형 사고 예방 주력

광주지역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수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안전보건공단과 발주처인 광주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동참했다.

지난해 12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이후 공공발주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지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에서는 재래형 사고 감축을 목표로 추락·끼임·부딪힘·화재·폭발·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유형과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최근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부딪힘·깔림 등 위험요인이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현장에 지시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세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AEO 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2009년 이후 네번째 인증…AAA 최고등급
신속 통관·수출입 검사 비율 축소 등 혜택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청사 소통마루에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역량 등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정한다. 국내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 비율축소 및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통관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지난 2009년 최초로 공인인증을 받은 이후 이번이 4번째 갱신으로, 가장 높은 AAA 등급을 재공인 받았다. 최근 전남대와 북구 오룡동 전남대 첨단캠퍼스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를 출범하고 패키징 분야에서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산학 협력 거점을 마련한 바 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불확실한 대외 여건변화에도 AEO 제도의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면서 "K-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데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